

[성명]

3.27총파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자

국민의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 “정치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며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 철회하라”고 노동자를 겁박하고 나섰다. 보수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여론몰이에 혈안이다.

헌법 정신을 모독하는 자, 과연 누구인가.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며, 온갖 불법과 탈법을 앞세워 권좌를 지키는데 눈먼 국민의힘과 경총, 당신들이 아닌가. 감히 민주노총에 불법 운운하며 겁박하려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둑이 제발 저리는가.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 헌법적 권리주체인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서는데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힘을 동원해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것은 헌법적 권리다. 정치적 요구는 노동권 생존권과 무관하지 않다. 법률의 개정, 정책, 예산, 심지어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조차도 노동자의 삶과 밀접하다. 지난 역사에서 노동법 개정, 실업급여 예산 삭감, IMF 협정은 수많은 노동자를 가난과 죽음으로 몰지 않았는가.

왜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4항에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했겠나. 왜 저들은 체포조를 구성해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고 감금 사살 계획까지 준비했겠나. 윤석열 내란수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노동자 단결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0년 조합원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일구고, 길을 열어 광장에서 백만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이유 없이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온 수거 대상은 5백여명이 넘었고, ‘수집 장소’는 옛 삼청교육대 터라고 한다. 군은 윤석열 석방 나흘 뒤 ‘영현백’ 3000여개 긴급 발주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몽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싸울 것이다. 윤석열에게 살인면허를 줄 수 없다.

민주노총 3.27. 총파업은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건 결단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달려있다. 한국 사회 고비 고비마다 시대와 민중의 요구를 마다하지 않은 노동자가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이 3.27.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25.3.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